

# 기재부 “대외신인도·산업계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최상목 부총리, 비상국무회의 주재 해외투자자 대상 韓경제 설명회 개최  
美 신정부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  
예산안 내년 초부터 정상 집행돼야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논의 요청

기획재정부가 8일 국가 대외신인도의 하락 가능성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상 시국 속에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 및 해외투자자 상대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합동 성명문을 통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룸을 호명하고 있다. /뉴시스

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과련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1월 임기 시작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

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일정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 직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비트코인, ‘금’ 경쟁자 되나… 내년엔 20만달러 기록 전망

올해만 145% ↑… 트럼프 효과 특독  
SEC,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 예상  
연준 “비트코인, 달러 아닌 금 경쟁자”  
번스타인 “10년간 금 대체할 수 있어”

지난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역시 비트코인을 ‘금’ 경쟁자라고 언급한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2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8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장중 10만3900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시세가 역대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2009년 이후 15년 만, 2017년 11월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4만2000달러로 시작했고, 미국 당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힘입어 7만3800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 차익매물 실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5만4000달러까지 하락했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10만달러 돌파라는 새 역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해만 145% 상승했고, 미국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53% 급등하면서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소셜에 “비트코이너(비트코인 소유자) 축하한다”라며 “\$100,000!!!”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축했다.

이처럼 10만달러 돌파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면서 투자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앳킨스 전 위원은 은행, 암호화폐 업계, 금융 거래 회사 등을 고객으로 둔 컨설턴트 회사 패토맥 글로벌파트너스를 이끌었다.

차기 SEC 위원장은 3조 달러(약 4240조2000억원) 규모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준의 의장까지도 비트코인을 금에 비견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 대담에서 “비트코인은 가상이고 디지털이지만, 금과 같다”며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고 금의 경쟁자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자산 군으로서 ‘유지력’을 지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시총)이 7번째로 높은 자산에 등극했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2조달러(약 2848조원)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2조 1430억달러) 바로 뒤에 이름을 올렸다. 비트코인 시총은 1위 금(17조9330억달러)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만달러 돌파 시 단숨에 시총 2위를 기록하게 된다.

실제 시장에서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2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향후 10년간 금을 대체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2025년 말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더 이상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말 12만5000달러까지 치솟고, 2025년 말에는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정치불안 장기화… 금감원, 업권별 현장소통 강화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 예정  
유동성·환율 등 주요 위험요인 점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 업권별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와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와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령 이후 커진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하는 확대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



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국민의 힘 불참으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며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각 업권에 유동성·환율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시장 급변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증권사 CEO 간담회와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특히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인 지난 5일에는 36개 증권사 CEO들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러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달리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4일부터 최근거래일인 6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1조원85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조유의 사태 속에서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증시안정펀드(10조원)와 채권시장 안정펀드(40조원) 사용 준비를 마쳤지만, 투입 시기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사진)도 지난 6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탄핵, 권력 교체, 정치적 불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리·수수료 산정기준 개편 등 공정금융 성과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성과 공유

금융감독원의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년간 총 21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힘쓴 성과를 공유했다. 추진위는 내년에도 소비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진위가 수행한 1년간의 활동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8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감원은 추진위 설치배경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술적인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올해 ▲금리·수수료 부담

의 실적 완화 ▲금융거래 시 불이익 소지 재고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추진위는 우선 소비자의 금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하여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했다.

추진위는 향후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하고 소비자의견수렴 채널 다양화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